

東北亞 地域協力과 中國, 日本

鄭慶逸*4)

1. 개관(overview)

북미에서의 NAFTA 그리고 유럽에서의 EU가 지역협력 또는 통합 형태(RIA) 모습을 구체화함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RIA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학자, 언론 및 정치가 사이에도 점차 비중을 갖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에는 '앞으로의 세계'가 세 개의 축(three pillars), 즉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태평양권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흐르고 있다. 또한 정치시대에서 점차 경제의 시대로 넘어가는 추세하에서 이미 그 모습을 갖춘 NAFTA와 EU가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위하여서 지역협력이 아시아에도 있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나 제안이 거의 없었으나 1967년 이후 ASEAN과 함께 PECC, PBEC, 그리고 최근에 와서 APEC 등 지역협력에 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협력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이(속도의 둔화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간다면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도 이에 따라 높아질 것이며, 어떤 형태이든 RIA의 출범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지역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몇가지 사항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할, 중국의 지역간 경제성장의 불균형, 중국과 아세안간의 경쟁적인 산업구조, 일본 및 한국 해외투자의 지역적 편중경향, 경제집중지역으로 등장한 베이징, 서울, 동경, 홍콩, 상해 등 지방경제(sub-regional economy), 일본의 수입시장화 문제 등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이 RIA로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범위, 지역내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이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미국의 정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협력이 통상단계에서 출발하여(business-led) 점차 지역안보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들 중산층의 소리가 각기의 사회에서 중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단계로까지 올라가는 추세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전을 가진 지역지도자들은 우선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지역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계기와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外交安保研究院 研究委員

2.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모색(approaches)

최근 학자,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의 하나가 지역주의 또는 지역협력 문제이다. 정치인들은 지역통합(RIA)이 마치 21세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panacea)이라는 환상을 갖고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지지 표명을 통하여 정치적 인기를 얻고자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논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67년 일본의 다케오 미키 당시 수상은 PAFTAD(Pacific Free Trade and Development) 회의를 동경에서 주최하였고(이듬해에 한국도 참여), 같은 해에 ASEAN이 발족되었으며 1968년에는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이 출범하였다. 이러한 지역협력 논의는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나온 새로운 인식 즉, 지속적이고 확대된 경제발전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1960년-70년대의 일본을 모방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기러기형(flying geese pattern) 경제성장은 지역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켰다. 1980년 호주 수상 Crawford와 일본의 오히라 수상에 의하여 제의된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은 이와 같은 확산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PECC가 방향을 정착하는 시기인 1988년 호주 수상 Hawks는 APEC 창설을 제의하였으며 미국은 재빨리 이를 지지하였다. APEC 제의는 북미에서의 NAFTA와 동남아시아에서의 AFTA 출범으로 호주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마침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신장하려고 하든 미국이 이해와 일치되며 일본, 아세안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창설되었다.

PECC와 APEC은 많은 부문에서 중복되고 있다. 이 둘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1993년 시애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의도가 APEC은 정부간 모임인 정치 forum으로 준정부간 모임인 PECC는 경제로 양분화하려는 것이 알려지면서 통합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다. APEC이 앞으로 아시아의 RIA로써 성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ASEAN 국가(특히 말레이시아)들은 미국이 APEC을 미국의 이익보호 또는 EU와의 협상에 이용하는 도구(leverage)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APEC가 NAFTA와 EU에 대한 상계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루 수상이 중국 이붕 수상을 환영하는 만찬연설에서 제의된 EAEG는 이와 같은 우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EAEG는 그 후 EAEC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3년 ASEAN 정상회의에서 APEC 밑의 Sub-regional 모임(caucus)으로 받아들여졌다.

냉전시대의 동북아 지역협력은 지역내 국가간 정치이념의 상이로 안보적 측면에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안보협력은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한 것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협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과 함께 한국의 러시아, 중국과의 수교는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안보의 개념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면서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주의를 받고있는 군비증강,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증강문제도 냉전시대에는 불가능하였던 다자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라든가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경제·환경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양상이라고 하겠다.

1994년 시동된 ARF(ASEAN Regional Forum)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의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ARF는 ASEAN 회원국과 한·중·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몽고이며 캄보디아와 PNG가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6년서부터는 군관계인사들도 참여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안보포럼으로 정착하였다. ARF가 목표하는 바는 신뢰구축방안 진작, 예방 외교 발전, 분쟁해결방안 개발이나 참여국은 어떤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토의의 결과는 회의성명 형식으로 정리되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ARF가 First Track이라면 1992년 서울서 제의된 CSCAP(Council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Pacific)과 Asia Pacific Roundtable, 그리고 한국이 제창한 North East Asia Security Dialogue는 비공식적인 Second Track Forum이다. CSCAP은 한, 중, 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비올빈, 인나, 싱가포르, 태국, 월남이 회원이고 EU와 인도가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목표하는 바는 지역적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을 위한 구조화(structured)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회의의 진행이 이론에 치우쳐 있고 참석자들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의에서 지역내 현존 문제점이 확인(identification)된다던가 하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안보대화는 1994년 방콕 ARF-SOM 회의시 한국이 제의하였으며 국방인력, 백서교환 등 상호보장조치(Mutual Reassurance Measures)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북아에서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 중, 일, 러, 미국의 학계인사들이 캘리포니아대학의 Institute of Global Conflict가 주관하는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공식(정부대표도 개인자격으로 참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3. 동북아 지역협력의 일반적 전망(Blueprint)

동북아 국가들은 앞으로 NAFTA, EU와 같은 거대한 지역체(regional community)로써 block 개념과는 차별됨)와 총체적인 안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개개국가가 앞으로 이 두 거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 된 지역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협력 제의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협력 Forum을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APEC와 ARF가 이와 같은 협력의 모태가 될 수 있다. 1988년 호주 Hawke 수상에 의하여 성립된 APEC는 21개 회원국을 갖고 있으나 지역협력체라고 하기에는 회원구성(가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APEC는 개방성과 지역성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이 초지역적이라는 점, 미국의 APEC의 발전에 대한 의도가 도를 지나친 감(over-ambitious)이 있다는 점(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과 같은 모임은 APEC의 발전에 어떤 계기를 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국, 대만문제 등 미묘한 사안이 있음을 간과한 부적절한 회의였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때 APEC가 지역협력체, 특히 동북아 지역협력을 마련하는 기구로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밖에 타지역협력체로부터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상황하에서의 non-exclusivity성, 그리고 미국, 캐나다와 아시아의 이해가 조화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요인은 APEC가 아시아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ASEAN은 1967년 당시의 이념대립 상황을 반영한 정치협력체로서 출발하였다. 경제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이후, 특히 월남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시점으로 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ASEAN을 결속시킨 접착제(glue)가 탈냉전의 새로운 상황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ASEAN을 결속시킬 접착제로써 제의된 것이 경제와 통상이다. 즉 ASEAN은 1991년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되고 NAFTA, EC와 같은 지역협력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92년 제4차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나온 AFTA는 이러한 ASEAN의 모색과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1994년 ARF를 출범시킴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ASEAN이 회원국을 확대하고 나아가 동남아 공동체를 구상하는(1994. 마닐라의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및 1997 ASEAN vision 2020)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은 인구 5억, GDP 규모는 6,300억불(1995), 수출규모는 3,170억불로 세계 제4위가 된다. 그러나 ASEAN 역내교역은 총교역의 17%(1985)로써 그 이후 별다른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의 중계무역을 제외한다면 역내교역은 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ASEAN이 제1차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과 교역시장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EAEC 구상과 1998년 하노이의 Asian Summit의 정례화는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AFTA도 점차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 예상된다.

현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 양상을 보면 안보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미국과의 협력을 기본틀로 하고 아세안과의 연계를 통한 다자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간다는 것이고, 경제통상분야는 미국, EU 편중으로부터 ASEAN을 포함한 지역협력을 통하여 교역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투자는 교역확대의 첩경이고 유효한 방안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FDI가 1980년대의 중국 편중으로부터 점차 ASEAN으로 이동되고 있는 통계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ASEAN이 불가결한 일부임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지역 협력이 ARF와 ASEAN+3의 기본틀에서 발전되어 나간다는 전제를 받아드릴 경우, 이의 발전을 여하히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RIA의 발전과정은 "business-led"에서 출발하여 정치안보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고있다. 동북아 지역에도 과거 RIA에 관한 시도가 있었고(아래 예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Yellow Sea Economic Zone
- Taiwan Fukian Economic Zone
- Hong Kong-Shenzhen Economic Zone
- Guang Zhou-Shenzhen Economic Zone
- Northeast Thai Economic Zone
- South Thai-Penang Economic Zone
- Growth Triangle(Joho Baru, Singapore, Bantam)
- South Vietnam Economic Zone

또한 Pan Asian Railroad Project 라든가 Mekong강 개발사업은 동북아지역협력 사업으로 이미 시작되었거나 타당성 조사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한 첫단계의 동북아 지역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인가, 둘째, 이 지역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경제발전 단계가 상향되면 계층구조에서 중산층의 폭도 확대된다. 이들 중산층은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이의 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즉 시장경제 위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가 확보될 것을 요구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압력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중산층의 확대는 두번째 단계의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동북아지역이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교하여 중산층의 발달이 현저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들의 공유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현주소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협력과 중국, 일본(China and Japan)

중국은 ARF나 APEC 등의 다자외교 forum 참여를 통하여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위협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회있을때 마다 강조하고 있으나(1996년 CSCAP 회의시는 주재 중국대사가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발언) 이른바 아시아의 insular 국가군(일본, 한국, 아세안)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또는 잔존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중국이 경제대국화 하면서 동북,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2,300만명의 화교권 경제와 함께 강력한 수출시장 경쟁자로 부상할 경우 크고 작은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안보 측면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남중국해 전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일부 도서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ASEAN 국가)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첫째, 핵보유국이라는 것과 둘째, 동남아 경제권의 85%을 갖고있는 2,500만명의 화교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greater China 경제권이 insular 국가군(일본, 한국 여타 아시아 NIEs) 규모보다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경제권이 정치적 안정하에서 협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려할 것이 없으나 지역간 소득격차(특히 대련 상해 광주의 발전된 연안지역과 그렇지 않은 내륙지역), 도시의 인구집중, 관료의 부패, 정치권의 균통술 약화 가능성 지방분권화 조짐 등의 문제로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고(1997.2 교토대학 Economic Review)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형태의 경제체제,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가 전체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반대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함께 향유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할 경우, 지역의 해게모니를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것인가는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중국이 주변국가의 안보위협 요소가 된다면, 아시아의 NIEs와 수출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야기한다면, 정정불안으로 경제 분권화 현상이 발생한다면 하는 것은 지역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측면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및 여타 NIEs 국가

들과 어떤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993년 일본공업은행이 조사한 일본기업의 투자지역 선호도 조사에서 92년 93년 중국이 집중되었던 투자가 94년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여 중국대신 ASEAN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여타 동북아 국가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일본은 지역협력 측면에서 중국에 상응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안정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 신장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다자외교 forum을 이용하여 지역국가들과 협력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위한 양자협력(미-일 안보, 러-일 정책협의, 일-중 안보대화)의 중요성은 간과하지는 않고 있다. 지역협력에 관한 일본의 기본구상은 한국 및 중국과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특히 2차 대전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일본의 의지에 대한 이들 양국의 신뢰를 획득하는데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군비축소, 지역내 군사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보대화가 지역협력으로 가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금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수입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이 일어나고 있다. 1998년 하노이에서 발표된 미아자와 푸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여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나 일본이 직접적으로 자국을 수출시장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앞으로의 지역협력에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국가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고위인사는 동북아에서의 첫단계 지역협력(business-led)이 구체화 된다면 그 주체는 일본과 한국이 될 것이며 중국과는 중국자체의 사정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의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자유무역 설치안이 제의된 사실과 주한 일본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RIAs의 초기 형태인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한 것은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5. 맺음말(conclusion)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은 NAFTA와 EU와 같은 강력한 지역협력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속성상 Catch 22의 문제를 배태하게 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드라이브를 견제하기 위하여 서방 OECD국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동북아 지역의 regional forum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하겠다.

동북아 지역협력의 베이스는 ASEAN RF라든가 ASEAN+3 그리고 Asia Summit 등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베이스를 여하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특정개발지역 또는 프로젝트에서의 상호협력,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은 지역내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다. 또한 경제발전이 집중된 지역 예컨대 상해지역, 서울지역, 동경, 오사카 지역간 협력(Sub-regional cooperation) 문제도 차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동북아의 공통 문제해결에서 출발한 지역협력이 경제통상으로 발전되고 다시 정치사회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ASEAN과 cross-linkage를 형성할 것인지, 또는 현재와 같은 ASEAN Framework 내에서 어느 기간 느슨한 형태의 협력과 대화가 계속돼 나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지역협력에 필요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행한다는 과정은 결코 용이한 길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지역간 경제발전, 소득격차,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통제력 약화 가능성, 중국, 일본간의 군비경쟁과 지역내 국가간 군사협력문제 그리고 EAEC 논쟁에서 나타난 미국의 이해 등 허다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장해요인에도 불구하고 ARF, ASEAN 등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ASEAN 틀내에서 Sub-group로 간접적인 협력의 실적을 쌓아 왔으며, 특히 1998.12 하노이 아세안 정상회의 선언에서 발표된 Asian Summit의 정제화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지역협력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갖기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이 지역적이어야 한다. APEC과 같은 개방지역협력체는 개방과 지역적이라는 두 모순되는 개념을 갖고있는 기이한 형태(Oxymoron formula)이다.

또한 지역내 주요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협력자세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다자 forum에 참여하면서 영토문제 등을 양자가 아닌 다자협상에서 다루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이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NIEs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 FDI의 지역별 균형, 일본의 수입시장화 등은 일본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들로 하여금 지역체의 결성을 강요하게 할 때까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서 지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